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Foundation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현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발제자]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 연구회장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 자 후 원
#7079-4545

## 제37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 정책은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가치, 나아가 국제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입안되어야 한다.

■ 미디어 정책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미디어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은 전혀 실행하지 않으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 ◈ 미디어의 헌법적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을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동시에 자유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중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서보다는 시청자들의 권리가 더 강조되는 객관적인 성격의 봉사하는 자유(dienende Freiheit)이다.
-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 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표현의 자유" 측면을 넘어서 국민의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가치에도 주안점을 두고 국제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입안되어야 한다.

## ◈ 공영/지상파방송 정책의 문제

-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이사에 대한 압박과 교체를 방지해야 한다. 현 정권 초기에 임기가 남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에 대한 퇴진 압박으로 이사장 및 이사진이 중도 사퇴했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시청률이 10%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상파 방송은 광고수입의 감소로 만성적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KBS 수신료 인상과 MBC의 민영화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공영방송의 정상 경영을 위해서는 시청료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반발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적자누적으로 파산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상파 중간광고제도'가 전면 실시된다. '방통위'는 구조조

정과 민영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도 '중간광고 도입'이라는 미봉책으로 위기를 면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IPTV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송출료를 인상해서라도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지상파 방송의 송출료 인상분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 ◈ 종합편성채널 정책

- 2017년 재허가 심사시 TV조선은 막말,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많은 보수 패널들이 방송사에 의해 출연정지조치를 당했다.
- 2020년 MBN은 17가지 조건과 5가지 권고사항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승인 받았다. 현재 방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MBN측이 대부분 승소했다.
- 2020년부터 종편채널의 의무전송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종편채널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나 심사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과도한 채널사용료 산정으로 인해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이 부담은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 ◈ 뉴멀티미디어 정책

- 정책당국은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특정 분야에만 불평등하게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 및 표현의 자유 제고를 위한 '통합방송법'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나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미디어 정책의 이원화도 문제다. 현재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공영/지상파 방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정책기관이 분리되어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정책과 방통위의 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TT 등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주무행정부처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정책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처 통합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신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제안 과제

- 정부는 유튜브 등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전례 없는 강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좌파 진영에 불리한 얘기를 하면 심의를 통해 그 패널을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 나아가 언론중재법과 전기통신망법 개정안 등 소위 “가짜뉴스처벌법”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개인 표현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중립기관인데 언론중재위에 “가짜뉴스판단권”을 부여했다. 가짜뉴스처벌에 국가기관인 문화부가 관여하는 등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음란 표현물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Naver 등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꾹~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